

월요광장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재미로 점을 보는 사람부터 이에 상당히 의존하는 사람까지 정도와 동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점'(占)을 한 번쯤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점'을 보는 순간 점 하나만 빼면 '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점이 되는 점이 아닌 우리와 살고 있는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미래 예측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미래에 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오늘 하는 행동들의 결과물이다. 미래에 대해 판단하고 오

미래 예측과 지역

늘을 기약하는 것이다.

미래가 되면 현재의 미래 예측들은 상식이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위기는 선행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기회는 선제적으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위기는 현실이 된다.

미래 변화의 동인(動因)이 될 '메가트렌드'(예: 첨단기술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어 발생하는 잉여고용, 저출산과 고령화가 유발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 대기 온난화와 같은 기후·환경 문제, 화석연료 고갈이나 식량·물 부족과 같은 자원의 가치변동,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양극화로 야기되는 체제의 변화, 소셜네트워크와 모바일을 통해 분출되는 사회적 욕망이 만들어 내는 네트워크 사회의 진화 등)의 방향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다. 미래 기술(예: 드론, 스마트 도로, 나노기술을 이용한 생체탐구, 유전자 조작식품, 단백질 공업, 원격의료, 줄기세포

포, 실시간 통역 등) 또한 각 영역의 속도 차이는 있지만 그 방향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에 따라 의사 결정의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잘 봐야 한다. 보통 사람은 내게 불리한 것은 늦게 올 것 같고 내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은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한다. 기회는 내 생각보다 천천히 오고 위기는 내 생각보다 더 빨리 온다는 보수적인 속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이 변화하고 난 뒤에는 준비해 봐야 소용이 없다. 미래 예측은 변화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의미에 기초하여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에 관한 선행적 대응 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 기업, 국가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미래역량지수는 얼마나 될까?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 고민할 문제이다. 미래변화의 요소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지역을 이끌고 대표하는 단체장이나 의원을 선택하는 정치 참여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포퓰리즘이나 단기적 업적을 보여 주려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미래 변화의 예측에 맞추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매일 시끄럽지 않은 당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가 투표하는 행동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법조칼럼



박 승 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국회는 지난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전날인 3·1절에 테러방지법안 제정 문제로 국회가 한창 시끄러울 무렵,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입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와 함께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등에 대해 분석 자료를 냈다.

백대 이유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에는 공감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한 법률이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고,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

뜻밖의 희신

견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 배경은 국가정보원이 과거 우리 역사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사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는 데 있다.

필자는 평소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하여는 강력한 정치사찰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남북이 대치하고 세계경제가 무한 경쟁인 상황에서 적어도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 지 여부는 국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정을 좌우할 핵심 공직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정보기관의 감시를 감수하여야 할 터이다.

그런데, 테러범죄가 무섭다는 이유로 아무나 감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테러범죄가 우려되는 사람은 다에서(IS) 대원이 아닌 이상 애매하다. 법원의 영장주의가 어떻게 지켜질지도 애매하다.

하어튼 감사하게도 몇몇 언론에서 성명을 기사화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법안 통과 직전에 성명서와 설문 결과를 국회의장과 대한변협은 물론 당시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보내 바 있다.

어떤 가시적인 결과나 답변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해당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정치사찰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물론 곧장 휴지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3월10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는 접수증을 익일특급 우편물로 보내왔다.

급 답신을 보고 '두고 보자'라는 뜻이라며 '등골이 오싹 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만큼 공포 정치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적지 않다. 농담처럼 성명서를 준비한 사람은 근심하고 앞으로 지속하자는 말도 나왔다.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새누리당으로부터 막상 답변을 받고 보니 나머지 정당의 행동과 비교됐다. 야당들은 20일

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예상한 대로다.

답신 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웅충할 것이다. 하지만 반성 여부를 떠나 국민이 보내 준 의견에 대해 형식적 답이라도 하는 새누리당 시스템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예산과 인력이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신을 보냈으리라. 미래 집권을 준비하거나 과거 집권했던 야당들이 현재 새누리당의 국민 소통에 비해 부족한 느낌을 주면서 격정도 되고 열도 받는 게 지나칠까.

그것 게 머 어렵다고 '편지 잘 받았네요'라고 답장 하나 쓸 사람이나 갖다 붙일 문서파일 복사본이 없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행복은 뒷전이고 자기들끼리 치고 박느라 정신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0시간 넘게 화장실도 가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온 야당 의원들의 열정을 어찌 평가할 수 있을까 마는 그에 못지않게 국민과의 소통은 중요하다.

기 고



김 수 완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

정부는 창조경제의 첫째 국정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률 70%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산학협력 사업과 기술이전이 도움이 제공될 것이다.

산학협력이란 산업계와 학계라는 상이한 영역에 속하는 조직 또는 인력이 영역을 뛰어넘어 지식이나 기술에 관하여 일정기간 동안 협력하는 상호 작용 프로세스를 말한다. 기술이전이란 형태가 없는 기술과 지식을 유형의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공식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관련하는 과학, 기술상의 구체적·체계적 지식, 기능, 기기를 산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산학협력력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과 기술 이전

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생산현장으로 직접 연계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그 수준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산학협력 사업과 이를 통한 기술이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산업계에 적절히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교 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설립, 애로기술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하여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기에 이전되어 상용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됨으로써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지역 대학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역할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윈윈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대학에서는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기업의 취약부분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은 대학과 기업간 맞춤형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인

적, 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경쟁력 향상, 매출 증가 등으로 연결되어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와 기업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이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쉬워지며, 아이디어 창출부터 사업화 진행까지 기업의 니즈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이다.

이와 같이 산학연의 연계 협력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상호 역량을 보완하는 동시에 연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위험성을 줄이고, 연구개발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

가 타 기업이나 대학, 출연연구소 등과 연구협력 실적이 없다. 기업 쪽에선 대학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현행 지원체계상 문제점으로 는 정부 및 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 부족,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부족, 협력성과의 효과 부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학연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대학 및 기업이 일체가 되어 지원하고 있다. 대학 내에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네트워크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산학간 기술이전 및 연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과 대학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학 내 자원을 개선하여 산학협력단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들도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교류협력 방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이미 구축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복합 산학협력체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社 說

후보 등록 마감…자질·합량 미달 가려내야

4·13 총선에 나서는 광주·전남 후보자들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지난 25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최종 경쟁률은 광주 8개 선거구 5.4대 1, 전남 10개 선거구 5.2대 1로 지난 19대의 경쟁률(광주 4.1대 1, 전남 4.4대 1)을 넘어섰다. 전국 경쟁률은 3.73대 1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에 빠진 서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줄 인재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갈수록 깊어지는 빈부 갈등의 골을 메우고 소외 계층의 시름을 덜어 줄 역량 있는 인사를 뽑아 국회에 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마자의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공약은 가깝게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멀리는 국가정책 결정의 방향타가 돼 유권자의 생활에 파고들며 되므로 절대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17대 선거 이후 12년 만에 주요 야당이 분열된 상태

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패권'에 맞서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국민의당이 뒷발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파와 후보가 누구이나 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쓰다듬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만한 세력에 표를 쥐야 비로소 권의 옹호가 가능할 것이다.

후보별 삶의 궤적이 담겨 있는 병역·납세·전과 등은 도덕성의 기준이다. 다행히 광주·전남의 이번 총선 후보가 운데 체납자는 없지만 전과외의 경우 동거와 파벌적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선거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가정에 우송될 선거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는 후보자의 세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유권자들은 이 또한 꼼꼼히 살펴 합량 미달 후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검증 없는 공직자 재산 공개 무의미하다

가난한 일반 시민들은 갈수록 빛이 들어나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10명 가운데 7명꼴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켜보는 서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정부 재산 공개 대상자 1813명 가운데 74.6%인 1352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500만 원(4.3%) 늘었다. 국회의원도 평균재산 19억6000만 원으로 10명 중 7명이 재산을 늘렸다.

공정하고 합당한 재산 증식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고위 공직자 재산 증식의 배경이 대부분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점이 다. 물론 위법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의 최고 수혜자가 고위 공직자인 셈이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19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실시된 지 30년이 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많이 노출됐다.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 고지 거부도 중 하나다. 이번에도 10명 중 3명은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과지를 거부했다. 드러난 공개 재산만으로도 박탈감·위화감이 커지는 마당에 숨겨놓는 지갑이 있다면 누가 신뢰할까. 일정 직급 이상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정치 및 수사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 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허술한 방식으로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다.

無 等 鼓

총선이 다가올수록 금배지에 눈이 뒤집힌 정치인들이 별치는 막장드라마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입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외치면서도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생각에 비방은 물론 흑색선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야 할 것 없이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해 피 터지는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이미 빠져 나올 수 없는 증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증독 하면 떠오르는 생물이 있다. 는데 무려 6000만 원을 허비해 국민을 분노케 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재산을 모두 날리는가 하면, 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진투구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금배지 증독도 약물 증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갖는 국회의원 당선은 목적이려면, 이는 금배지 증독이 분명하다. 다시 강조하고 싶다. 증독은 자신을 해치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과 국가마저 망칠 수 있다.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배려운전 습관 길러 보복·난폭운전 줄이자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난폭운전으로 하루에 각 지역마다 몇 건씩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3월 4일 오후 광주시 남구 주월동 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운전자들이 차로 진입문제로 시비가 붙어 진로를 변경하

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벌칙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해 형사입건시 40일간 면허 정지와 구속시 면허가 취소가 된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가해자들은 보통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던지 아니면 급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격앙되어서 이성을

잃고 차량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예방법은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폭 및 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는 길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김병업·광주시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5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